창사 66년 새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남양건설

광주매일신문

治病장수 百歲건강
목포 청연한방병원

제8834호 대표전화 (062) 650 - 2000
kjdaily.com
2024년 12월 24일 화요일 (음력 11월 24일)

광주 자원회수시설 1순위 후보지에 '광산구 삼거동'

●입지선정위원회 3차 공모 결과 발표

입지·환경·경제적 조건 등 5개 분야 23개 항목 평가

소각열 활용 산단 인접·환경 훼손 최소화 등 최고점

주민 수용성 확보 관건…내년 8월말 최종 입지 확정

광주시가 오는 2030년 가동을 목표로 추진 중인 자원회수시설 1순위 입지 후보지로 '광산구 삼거동'을 선정했다.

1·2차 공모의 연이은 좌절 끝에 3차 공모 만에 입지 후보지를 확정했지만 삼거동에서도 주민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팽팽히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시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23일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치구가 제출한 4곳 중 '광산구 삼거동'을 최적후보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거동은 자원회수시설 특성상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단지(빛그린·미래차)가 인접해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부지 경계를 기준으로 왕복 4차선 도로에 인접해 접근성과 진입 여건이 좋고 국토환경성 평가등급상 자연환경 훼손이 최소화된다는 점도 반영됐다.

타 후보지의 경우 모두 개발제한구역인 반면, 삼거동은 관리지역으로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약 1-2년 정도 단축될 수 있다는 점도 1순위 선정 요인으로 작용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광산구 삼거동을 비롯해 서구 서창동, 광산구 동산동·지평동 등 4곳의 입지 후보지를 대상으로 현장 답사, 전문기관 평가 등을 실시해 최종 순위를 확정했다. 평가 결과, 광산구 삼거동은 88.6점으로 최고점을 받았다. 이어 광산구 동산동 80.6점, 광산구 지평동 80.1점, 서구 서창동 75.9점을 받았다.

최재완 입지선정위원장은 "입지·사회·환경·기술·경제적 조건 등 5개 분야 23개 항목에 대한 배점표를 확정했다"며 "전문기관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위원회 검증을 통해 최종 순위를 매겼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과정과 결과를 오는 1월 시청 홈페이지, 관보, 일간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시청, 자치구 등 지정된 장소에서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 이후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내년 8월 말-9월 초 최종 입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총사업비 3천420억원을 투입해 6만6천㎡부지에 하루 처리량 650t 규모의 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9년 12월 완공 목표다.

광주시는 2016년 12월 상무소각장 폐쇄 이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소각장이 없는 곳으로 오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소각시설과 음식물 처리시설, 재활용 선별장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앞서 광주시는 2차례 공모에서 후보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입지 후보지 선정에 실패한 바 있다. 이후 후보지 선정 방식을 기존 민간 중심 공모 방식에서 '선(先) 자치구 신청, 후(後) 시 추진' 방식으로 전환해 3차 공모를 실시했으며 사업 추진 2년 만에 입지 후보지를 확정했다.

그러나 자원회수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적지 않고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주민 수용성 확보가 향후 시업의 성패를 가를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현윤 광주시 기후환경국장은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후보지 주민 반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광산구와 함께 지역 일대의 발전 방안을 논의해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국장은 "반대 여론을 어떻게 설득시킬지도 행정의 역할인 만큼 자원회수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오해를 개선시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변은진 기자

지산사거리-두암지구삼거리 구간 교통 정상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 구간 도로가 속속 정상화돼 시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오전 광주 동구 산수오거리 인근에서 강기정 시장과 임택 동구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산사거리부터 두암삼거리 구간 도로 교통개방 행사가 열렸다. 사진 왼쪽은 한창 공사중이었던 지산사거리 방향. ▶관련기사 5면 /김애리 기자

尹 수취 거절에 헌재 결론 "받았다 간주"…27일 첫 기일

"대법 판례 '발송송달' 처리…관저 20일 서류 송달 간주"

첫 변론준비기일 27일 예정대로 진행…답변서 제출 요구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자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양측이 향후 심리 내용을 검토하고 일정을 논의하는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27일 처음 열린다. ▶관련기사 2·4면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19일 탄핵심판 관련 접수통지 및 답변 요구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서, 준비 명령 등 각종 서류를 윤 대통령 관저로 우편 발송했다.

이 서류는 20일 관저에 도달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에서 재차 수취를 거부했고, 헌재는 서류가 관저에 도착한 시점에 윤 대통령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요구한 답변 시한은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 사항은 아니다.

헌재는 준비명령을 통해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도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 시한은 24일까지로 변동이 없다.

다만, 윤 대통령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는 등 심판 절차에 임하지 않고 있어 정해진 시한까지 서류를 제출할지는 미지수다.

1998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는 형사소송법상 보충송달·유치송달 등이 어려운 경우 형사재판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이 경우 송달의 효력은 해당 장소에 도달한 경우 발생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심판은 형소법을 준용한다.

헌재는 19일 재판관 회의를 열어 수령 거부 상황에 대해 논의했고, 이 자리에서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측이 수령을 계속 거부할 경우 발송송달로 간주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결정 배경에 대해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발송송달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측도 대리인 선임계를 내지는 않았다. 다만,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17명 규모의 대리인단 명단을 확정해 조만간 선임계가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 16일 국회의장과 법무부 등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헌재가 요청한 시한은 이날까지지만 아직 두 기관 모두 의견서를 내지 않았다. 법무부 측은 제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성탄절 대체휴무…25일자 신문 쉽니다